

2025. 10. 15.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이후: 뿌리뽑힌 삶의 증언과 광주의 책임

소준철¹⁾

먼저 발표자 두 분과 증언자 다섯 분의 이야기를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풀지 못한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전통’이 무엇이며, ‘뿌리있음’과 ‘뿌리없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가 석사학위논문을 쓰며, ‘전통’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전통의 층위는 꽤 다채롭습니다. 민속학자들이 탐색하는 오래 이어져 내려온 풍속과 습관이 있고, 에밀 뒤크amps이나 에릭 흉스봄, 넓게 보면 피에르 노라 등의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로 확장할 수 있는 ‘만들어진 전통’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넓힌다면 그 사회의 감정과 이성, 자연과 문화 등의 이분법이 반영된 것일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더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두 전통의 틈바구니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가 수준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급변하는 대량 생산-대량소비 체제의 사회에서 쓸모를 잃어가는 케케묵은 구식의 ‘인간 문화재’ 따위의 존재와 그 애호가의 영역이 독특하다는 애매모호한 질문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때는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뿌리를 만드는 주체가 민족과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 아닌 개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후 연구로도 이어졌습니다. 뿌리있음이 아닌 뿌리없음의 상태는 어떨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구한 바는 없지만) 한국전쟁으로 발생했던 전쟁고아, 정상성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버려지며 소외되었던 혼혈아와 미혼모의 자녀, (그나마 연구했던) 경제개발기에 돈을 벌겠다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왔으나 우연하거나 불법적인 사정에 휘말린 부랑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 농업사회적 전통과 단절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을 ‘뿌리 뽑힌’ 상태로 보아야지 않을까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마주한 해외입양인의 존재와 삶은 지금까지의 제 생각이 지극히 일국적이며 입체적인 사회를 멋밋하게 만드는 방향이었음을 반성했습니다.²⁾ 거칠게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고아와 부랑자는 한국 안에서 뿌리가 뽑혔지만, 해외입양인은 국경을 넘어 뿌리가 뽑혔습니다. 또 부랑자가 경험한 농업사회에서 도시로의 이동 수준은 해외입양인의 문명과 언어 자체의 단절 경험은 완전히다른 사정입니다. ‘뿌리없음’을 구성하는 ‘뿌리 뽑힌’ 여러 삶이 있는 겁니다. 스웨덴으로 이주한 다섯 분의 이야기에서 Carina Dahlin/서정숙 님이 스스로의 상황을 “뿌리 뽑혀서 맞지 않는 토양에 심어진 나무”로 말씀하신 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뿌리뽑힘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이식’이라는 과정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Elisabeth Nylund/김미선 님이 느낀 낯선 한국

1)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junchol.kim.so@gmail.com

2) 누가 더 불행한지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각자의 불행이 있습니다. 생존자를 마주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타인의 불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불행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할지, 사회가 어떻게 성찰하고 반성할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소속감과 익숙한 스웨덴에서의 이방인이라는 인식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뿌리없음의 감각이 만든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Marlin Bergstrom/한옥희 님이 경험한 ‘블랙홀’이 (낯선 자로서) 아주 조금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다시 적자면, 해외입양인에게 ‘뿌리’는 단순히 부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뿌리 뽑힌’ 상황에서 자신과 송출국/수용국 양국의 문화 사이에서 이중의 부재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결핍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공백’(active void 혹은 constitutive absence)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공백’이란 단순히 비어있는 게 아니라,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주변을 끌어당기고 의식을 점유하는 결핍입니다. 해외입양인은 뿌리를 잃은 상태에서 다름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다른 우주에 새로운 뿌리를 강제로 이식당한 상태이기에, 문화의 부재와 그 공백 자체가 끊임없이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몸이 속한 문화와 불일치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확인하고, 재인식하며, ‘뿌리없음’을 늘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섯 분을 비롯한 해외입양인은 뿌리뽑힌 상태서 ‘지속적으로 결핍(감)을 인식’하며 ‘적극적인 공백’을 견디며 살아온 혹독한 역사의 증언자이며 생존자입니다.

이런 뿌리뽑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식민지 경험과 한국 전쟁 경험, 권위주의 독재 경험 등을 관통하며 끊임없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원가족을 상실하거나 원가족으로부터 이탈한 아동은 그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허약한 능력을 감추는데 급급했고, 민간기관을 통한 시설보호와 국외입양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고안했습니다.³⁾

먼저 한국사회서 1990년대까지 가장 중요한 아동보호의 방법은 시설 수용이었습니다. 주로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지원과 활동에 따른 민간 보육원(고아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⁴⁾ 고아 문제는 당시 현저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욕구의 실재를 대표하는 문제였으며, 그렇기에 지원 자원을 동원할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아동보호시설은 정부의 기준이나 인가 없이 설립이 가능했고, 외국의 민간원조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들 역시 등장해 문제적이었습니다. 그나마 1960년대 『아동관리법』에 의해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1976년이 되어서야 “불우아동건전육성대책”을 수립하고, 1981년 『아동복지법』을 공포하며 정부의 보호 정책과 시설을 재정비 할 수 있었습니다.

3) 당시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사회는 압축적 성장을 통한 빠른 개발이 이뤄졌지만, 그만큼 사회의 불안정성도 높았다. 사회복지학 연구자 이두호 등은 『빈곤론』(1991)에서 빈곤 가구의 생활고의 변화를 다음처럼 제시한다. 1967년 조사에서는 (1) 무직 무기술(37.4%), (2) 기타/무응답(14.5%), (3) 실직(14.1%), (4) 부양가족이 많음(10.5%), (5) 가구 주의 사망(8.0%), (6) 사업 실패(6.1%), (7) 노령(4.8%). 1979년 조사에서는 (1) 기타/무응답(22.6%), (2) 질병 사고(20.4%), (3) 가구주의 사망(13.4%), (4) 무직무기술(12.6%), (5) 유산이 없음(5.1%), (6) 사업 실패(4.8%), (7) 불구(3.3%). 1989년 조사에서는 (1) 고정수입 없음(51.7%), (2) 질병 사고(12.2%), (3) 정당한 대가 못 받음(10.8%), (4) 학비 부담(8.2%), (5) 기타/무응답 (5.5%), (6) 부양가족이 많음(4.3%) 등이다. 물론 이러한 빈곤의 이유가 아이를 버리는 이유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빈곤한 가족과 빈곤한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당시 정부의 허약한 능력 역시 문제입니다.

4) 고아원에 대한 관심과 종교 단체의 고아원 설립은 식민지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필요도 있다. 광주를 예로 들자면, 제종원 원장이었던 의료 선교사 로버트 월슨이 미국 남장로교 재정지원으로 장애고아를 위한 시설을 설립했다.

	아동양육시설		직업훈련		보호치료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시설 수	아동 수
1955	484	50,417				
1960	472	-				
1965	519	61,423	13	1,363		
1970	504	47,791	19	1,710		
1975	350	30,976	24	1,866		
1980	287	23,385	16	1,246		
1985	268	24,433	11	994	2	146
1990	261	22,535	7	444	7	415
1995	257	17,133	5	231	6	481

[표 1] 아동복지시설 현황(1955–1995,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연감』 각 년도)

그리고 이와 다른 전략이 바로 해외입양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국내에 남았고 어떤 이가 해외입양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건, 시설의 추천과 입양 희망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였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아동은 이 둘 사이에서 상품화된 상황입니다.) 그 시작은 참으로 잔혹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보고, 이들을 한국사회에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박정희 정권에서는 정부-민간입양단체 간 협의로 이뤄졌던 해외입양을 법제도화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해외입양대상이 혼혈아동에서 장애아동, 미혼모 자녀, 기아,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자가 없어진 보호 필요 아동으로 넓어졌습니다.⁵⁾ 특히 1961년부터 19979년 사이 미혼모 가정 출신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이 되는 숫자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혼모 자녀가 “1960년대 17.9%를 차지했다면 1970년대에는 36.5%로 증가했고, 1980년대에는 72.2%, 1990년대에는 92.5%”로 급증했습니다.⁶⁾ 1976년 입양특례법을 만들고 여러 계획을 세워 국내입양으로의 전환을 꾀하나 했지만 결국 철회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서 해외입양은 더욱 늘었습니다. 당시 연간 1만 명 이상 발생했던 기아와 미아를 사회문제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⁷⁾

5) 신필식(2018)의 연구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모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가족법 조건에서 자녀를 돌보고 싶었지만, (당시 사회에) 지원제도가 없었으며, (시설수용이나) 입양절차(가 강요되며) 다양한 인권침해”했습니다. 더욱이 친생모와 가족의 기록이 입양과정에서 위조, 삭제, 훼손, 교체 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이러한 시정이 해외입양인이 친생가족 찾기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70186>

6) 조가은(2019)의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51298>
 7) 해외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권리, 기관의 이익, 송출 국가의 이익, 수령 국가의 이익 등 가운데 ‘아동의 권리’이 부재함을 드러내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송출국가와 기관의 이익은 문제적입니다. 송출 국가인 한국은 아동 보호 비용을 절감하고, 입양 수수료를 통해 물질적 이득을 올립니다. 동시에 단일민족과 정상가족이라는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입양기관과 개인 간 계약 형태로 유도하는 지점에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해외입양이나 책임은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책임으로 둘릴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수령국가 역시 입양 이후 사후관리의 부재, 입양부모의 부적격성, 시민권 취득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기관은 모국 방문과 가족 찾기를 비롯한 입양인이 자기기록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해외입양이 아동의 삶과 앎을 중심으로 과정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연도별	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261,122	93,786	167,336
1953~1961	4,365	168	4,197
1962~1970	16,771	9,971	6,800
1971~1980	73,452	25,205	48,247
1981~1990	91,864	26,533	65,329
1991~2000	35,349	13,026	22,323
2001~2010	32,885	14,887	17,998
2011	2,464	1,548	916
2012	1,880	1,125	755
2013	922	686	236
2014	1,172	637	535

[표 2] 국내외 입양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 70년사 - 3권』, 157쪽)

제 부족한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입양인은 강제적으로 이식된 삶에서 Marlin Bergstrom/한옥희 님의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결핍을 인식하고 의식을 점유하는 '적극적인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속한 문화와 불일치함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이 '공백' 자체가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혹독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를 기초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입양인들의 '적극적인 공백'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주체적인 삶을 구성하도록 함께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아가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도 필요합니다.

둘째, 해외입양인의 삶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구조적 폭력이 낳은 결과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사회의 정상성을 중심으로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장한 입양아동들의 삶과 양심을 중심으로 입양 이후의 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역사의 증언자이자 생존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해외입양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할지, '뿌리뽑힘'을 강요했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의 삶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송출국이자 송출지로서 한국과 광주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기록 접근권 보장, 친생가족 찾기 지원, 위조된 입양기록 복원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입양기록의 위조와 훼손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질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다섯 분이 광주로 돌아오셨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책임지려 합니다.